

2002 한 · 미 21세기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 보고서

2002. 8. 26.

주최: 세계경제연구원(IGE) ·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EE)

후원: 한국국제교류재단(KF)

목 차

회의일정	5
참가자 명단	7
회의내용 (요약)	9
제1주제: 한·미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9
제2주제: 미국 외교정책, 남북한 관계 및 지역안보	14
Alan Larson 미국 국무부 차관 오찬연설	16
제3주제: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과 미국	17
부 록	
발표논문: Korea-US Trade and Investment Issues: A Need to Think Anew / Kim Kihwan (김기환)	25

회의 일정

2002. 4. 8 ~ 4. 9.

Peter G. Peterson Conference Cente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7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USA

4월 8일 (월)

14:00~14:30

개회 및 참가자 소개

· 사회: 사 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C. Fred Bergsten 국제경제연구소(IEE) 소장

14:30~18:00

제1주제: “한·미 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 발제: 사 공 일

Mustafa Mohatarem General Motors Corporation

김 기 환 前 대외경제협력특별대사

Edward M. Graha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00~

만찬 (주미대사 주최)

4월 9일 (화)

08:00~

조찬

09:00~12:00

제2주제: “미국의 대외정책, 남북한 관계 및 지역안보”

· 발제: 한 승 주 고려대 교수 (前 외무부 장관)

김 경 원 서울포럼 회장 (前 주미대사)

Marcus Nolan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12:00~12:30 리셉션
- 12:30~14:00 오찬
· 특별연설: Alan Larson 국무부 차관 (경제, 비즈니스, 농업담당)
- 14:00~16:30 제3주제: “지역 경제협력”
· 발제: 양수길 세계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前 주OECD대사)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C. Fred Bergsten
- 16:30~ 종합토론
· 사회: 사공일
 C. Fred Bergsten
-

참가자 명단

〈 한국측 참가자 〉

김 경 원	사회과학원 원장
김 기 환	전 대외경제협력특별대사
김 대 중	조선일보 편집인
김 성 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미주연구부장
김 영 희	중앙일보 부사장/대기자
김 용 덕	재정경제부 차관보
박 상 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사 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안 충 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양 성 철	주미대사 (현지참가)
양 수 길	세계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이 동 복	미국 기업연구소 초청연구위원 (전 국회의원)
이 신 화	고려대 연구교수
이 인 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조 건 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조 웅 규	국회의원 (한나라당)
한 승 주	고려대 교수 (전 외무부 장관)
현 홍 주	김 · 장 법률사무소 고문

(Observers)

강 문 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 소 일	George Washington대
박 일 봉	세계경제연구원
Gregory C. Eaves	세계경제연구원

〈 미국측 〉

C. Fred Bergste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Daniel Bob	ReedSmith
Stephen Bosworth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Christina Cavallo	Department of State
Anita Childs	Department of State
Gary Childs	Department of State
Inbom Cho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Gordon Flake	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
Carolyn Glassman	Department of State
Ruth Harkin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Edward Graha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elig Harrison	The Century Foundation
Melissa Lan	Department of State
Alan Larson	Under Secretary, Department of State
James Lister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G. Mustafa Mohatarem	General Motors Corporation
Marcus Nolan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Donald Oberdorfe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Jean Pritchard	The Boeing Company
Jeffrey Schot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obert Sennewald	Army and Air Force Mutual Aid Association
Joanna Shelton	Maureen & Mike Mansfield Center
Wendy Sherman	The Albright Group
Jonathan Solomon	Wall Street Journal, Asia
Richard Solomon	US Institute of Peace
David Steinberg	Georgetown University
Bruce Stok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an Tikvart	Department of State
Rob Warne	Department of State
Joseph Winder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회의내용(요약)

제1주제: 한·미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1. 주제발표

□ 한국경제 현황 및 전망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한국경제는 1997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1998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6.7%)을 보였으나, 그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1999년 10.9%, 2000년 9.3%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 지난해 한국경제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의 증가세에 힘입어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과 차별화를 이루었음.
 - GDP에서 개인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르며, 지난해 개인소비지출은 4.2%의 성장률을 보였음.
 - 이와 같이 다른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한국이 나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① 홍콩, 싱가포르, 대만보다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외적 영향을 덜 받은 점, ② IT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산업구조가 다각화된 점, ③ 지속적인 산업 및 금융 구조 조정 추진의 성과, ④ 경기부양적 금융·재정정책이 가능했기 때문임.
- 2002년 들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신용확대 등으로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정부는 올 상반기 3%, 하반기 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대부분의 전망기관은 한국경제가 올 5~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2년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경기회복 여부가 아니라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것임.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임.
 - 따라서 한국정부는 경기가 과열될 경우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비해 적절한 경기조절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한국은 2002년에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 그리고 월드컵 개최 등 국가적 대사가 있어 과열을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임.

□ 미국경제 현황 및 전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G. Mustafa Mohatarem, General Motors Corporation)

-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지난 해 미국경제는 많은 경제학자의 예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금년 들어 다시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음.
-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우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데, 1,700만대의 생산을 보인 지난해보다 15% 더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산업의 경우 경기침체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생길 정도로 경기가 좋은 상황이며, 경기회복의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자동차산업의 경기는 매우 긍정적임.
- 이와 같이 자동차산업의 경기가 긍정적인 것은 부시행정부의 조세감면정책,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현대, 기아를 중심으로 한 한국자동차의 2001년도 대미수출은 2000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였는데, 금년에도 역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미국시장은 일본 자동차업계 및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이러한 미국경제의 소비지출 증가세와 자동차 수요는 한국, 일본, 심지어 독일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임.
- 현대자동차가 미국 알라바마주에 현지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공고히 진행되고 있음.
- GM의 대우인수 역시 양국간 경제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나, 인수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대우의 경영상태가 지나치게 악화되어 협상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
 - 대우인수 협상에는 노사문제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으나,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여 협상이 진전될 수 있었음.
 - 대우인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비합리적인 경영행위가 기업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며, 최근의 상황이 일본경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경기호황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임.

□ 한·미 통상 및 투자 이슈 (김기환 前 대외경제협력특별대사)

- 최근의 한·미 양국간 교역통계를 살펴보면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있는 바, 1995년 500억 달러였던 양국간 교역규모가 지난해 5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6년만에 30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음.
-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강도가 미약하며 1990년대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미 양국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자동차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한국 정부의 정책보다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노력부족과 유럽 자동차에 비해 낮은 선호도 등임.
-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 철강산업의 긴급 수입제한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심화시킬 것이며,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을 위해 농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만들 것임.
 - 또한 도하 개발아젠다(DDA)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통상질서라는 틀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훼손될 것임.
 - 그리고 최근 한국이 WTO에 제소한 3건의 반덤핑과 1건의 긴급 수입제한에서 한국측이 모두 승소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의 무역구제조치가 보호무역주의적인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 하이닉스 지원에 대해 한·미 양국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는 1970~1980년대의 산업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일종의 금융시장 안정정책이라 평가됨.
- 한·미 양자투자협정(BIT)의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 기인하는 바, 스크린 쿼터와 특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지도력이 필요함.

□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Edward M. Graham, IIE)

- 제6차 한·미 21세기위원회 이후 한국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최근 기업 관리 및 지배구조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6차 한·미 21세기 위원회가 개최되었던 1999년에는 대우그룹이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지금은 엔론(Enron)이 그런 위치에 있음.
 -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구조조정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성공적임.
 - 중공업부문을 인수한 두산의 구조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인력감축 등 비효율성 제거에 적극적이었음.

- 최근 한국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적극적이며 구조조정 이후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는 미국 알라바마주에 현지공장을 건설하고, 중국 본토 및 대만에도 현지공장 설립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보여주고 있음.
 - 삼성전자의 경우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이 소니社에 근접하였으며 매출액과 이윤에서는 오히려 소니社를 능가하고 있음.
- 한국의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부실대출 등 우려되는 측면이 여전히 존재함.
 - 소비자 신용의 급상승, 소매중심의 금융경영활동 체고 등으로 한국 금융부문의 수익성은 최근 나아지고 있음.
 -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있어 한국정부의 현재 목표는 은행부문의 민영화인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의 금융기관 인수를 고려할 때 가장 우려하는 점은 숨겨진 부실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한국의 구조조정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됨.
 - 투명성 문제는 아직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부채규모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수협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많은 실정임.

2. 토론

가. 한국경제

- 미국측은 2002년도 한국경제가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경제는 과감한 금융 구조조정 및 신축적인 금융·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던 점에서 미국경제와 유사하지만 금융부실, 과도한 정부부채, 유동성합정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와는 다르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일부 미국측 인사는 가계부채의 급증, 부실채권 및 대출관행 등을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측은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분석함.

○ 한국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 미국측은 한국정부의 금융·기업부문 개혁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숨겨진 부채가 있는 것 같고 기업이나 은행 재무재표의 공개가 미흡하다고 평가함.
- 한국측은 기업 금융부문 구조개혁으로 기업의 이자보상비율(ICR), 은행의 부실대출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한국정부 역시 금융·기업회계의 투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나. 미국경제

- 미국측은 2002년에 미국경제가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연율 2.5%, 4/4분기 기준 4%의 성장을 전망한다고 하면서, 1/4분기 6%대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함.
- 미국의 정책과제는 경기회복에 따라 여하히 금리를 과거 정상수준(5%대)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과, 고도성장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의 유지 가능성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다. 한·미 통상현안

○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 미국측은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경제적으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획득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하원에서 TPA가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되었는데 만약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없었더라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과거 동경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때에도 섬유쿼타 등을 유지함으로써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함.
- 미국이 TPA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WTO 도하라운드(DDA)협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통상정책은 양자중심이 되어 한국에게도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이에 대해 한국측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급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배되며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바, IIE와 같은 미국 여론 주도층의 미국 의회나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을 촉구하고 미국이 세계무역자유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음.
- 특히 한국측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철강산업에 보호장벽을 높인다면, 한국과 같은 나라가 어떻게 민감한 농업개방을 국내적으로 설득시키겠느냐고 반문하였음.
- 한·미 양측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broad package로 민감한 부문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함.

○ 한·미 BIT 문제에 대하여,

- 한국측은 한·미 BIT를 한국측이 먼저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스크린 쿼타 때문에 타

결되지 못하는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음.

- 미국측은 스크린 쿼타 문제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한·미 BIT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함.

제2주제 : 미국 외교정책, 남북한 관계 및 지역안보

1. 주제발표

□ 남·북 및 북·미 관계개선 가능성 (한승주 고려대 교수)

- 북한은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허용하면서 한국 및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임.
 - 9.11 테러사태 이후 아프간이 미국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북한은 “악의 축” 발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있음.
 -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계획이 미국의 선거일정 등으로 실패한 경험을 되살려,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북 및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남북정책은 외부세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진다면, 경수로 사업이 연기되더라도 보복조치를 취할 충분한 경제적 실익 및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임.

□ 한·미 양국의 한반도 정책과 협력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

- 지난 50여년 동안 한반도 정책에 있어 한국의 입장은 미국보다 보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이 한국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과거 50년 동안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의 강경한 자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정책노선의 변화는 냉전종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한국 및 미국 정부의 정권교체 결과인 것으로 평가됨.

-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관점이 변화하게 되는데, 북한의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 및 정책은 북한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된다고 한국 정부는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 이에 반해 공화당의 부시행정부는 9.11 테러사태 이후 안보중심의 관점이 아닌 선악의 개념에서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음.
- 상기 정책노선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간의 협의와 협력이 과거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됨.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Marcus Noland, III)

-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선은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것인 바, 한국 및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대량살상무기, 非인권적 정권 등이 그 원인임.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빅터 차(Victor Cha)의 “독수리 포용정책 (Hawk Engagement)”인데, 이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구별됨.
 -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외부세계의 의존성을 제고시키고 기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임.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정권을 장기적으로 변화·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인 바, 북한 대중이 지니고 있는 인식을 전환하고 환상을 제거하는 것이 첫 목표임.
 - 이러한 차원에서 선악개념을 동원하여 대북정책을 조정해나가는 것인데, 김정일 정권의 제거 이후 再포용정책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정치개혁, 인권신장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임.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공화당의 레이건 및 前 부시행정부가 구 소련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정책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

2. 토론

가. 남·북한 문제 및 한·미 협력방안

- 한국측은 북한이 임동원 특사를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및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남·북한의 관계가 정체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함.
 - 한국의 입장로서는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외부세계와 가능하면 폭넓은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함.

- 햇볕정책은 그 동안 정책의 한계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에게 외부, 특히 남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북한의 개방과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음.
- 미국측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태도나 “악의 축”과 같은 강경발언은 그의 도덕적, 이념적 확신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시행정부의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함.
 - 따라서 미국의 대북협상은 다른 어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필요성에 기반을 둠.
- 대북관계에서 기회마련은 매우 중요한데, 현 부시행정부는 기회마련을 위해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함.
- 한·미 양측은 한·미간 대북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전략수립을 위한 진지한 협의와 정책조율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나. 반미감정

- 한국측은 최근 세계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2002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사건, 차세대 전투기사업,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반미감정이 일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미국측은 한국의 반미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 및 미국의 한반도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함.
 - 일부 미국측 인사는 최근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한·미관계에서 미국이 더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2/3 이상이 TMD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함.

Alan Larson 미국 국무부 차관 오찬 연설

- Larson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및 농업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Economic, Business and Agricultural Affairs)은 한국이 보여준 WTO, APEC에서의 협력과 對테러전쟁에의 협력에 감사함.
 - 자동차시장 확대에 관하여 공산품 평균수준으로의 관세율 인하, 세무조사 배제, 인식개선 등 3개항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BIT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여 한·미간 영화산업 협

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의함.

- 반덤핑 이슈가 WTO 도하라운드 에 포함된 것은 미국으로서는 덤핑의 폐해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절차강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함.
- 미국은 세계안보,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 등 국제공공재 신장에 노력하고 있고, 철강 셰이프 가드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길을 직선으로만 갈 수는 없으며 부시대통령은 TPA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함.

- 북한의 ADB 가입희망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경제통계 공개와 IMF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금융기구의 지원에 있어서는 북한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개혁이 중요하다고 함.

제3주제 :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과 미국

1. 주제발표

□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 (양수길 前駐OECD 대사)

-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제협력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총 25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싱가포르 등이 논의에 적극적임.
 - 이와 같은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하여 경제파트너십(Close Economic Partnership), 新경제파트너십 협정(New Ag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으로 불리며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체결된 것은 없는 실정임.
 -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논의는 한·중·일 FTA를 포함하여 총 9건인 바, 개념에 대한 논의 수준임.
- 이와 같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및 미주지역 등 세계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진정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타 지역의 논의 활성화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임.
- 그러나 농업, 수산업, 각국의 산업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어, 향후 체결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임.

-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체결가능성이 높은 경제통합은 한·일 FTA와 중·ASEAN FTA임.
 - 한·일 FTA의 경우 한·일 양국은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해 합의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
 - 중·ASEAN FTA의 경우 해당 FTA가 양 지역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아직은 논란이 많은 실정이나, 상기 FTA가 체결된다면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동아시아지역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활성화된 이후 동아시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자유무역협정(RTA)으로 확대될 것임.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한국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서방세계의 앵글로-색슨 모델은 아시아 금융위기 동안 한국의 금융부문 구조조정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설정을 위한 엔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최근 한국의 구조조정 경험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또 이러한 경험은 동아시아지역의 교역에 이용될 동아시아 단일통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한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계획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보다 개방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진행되었음.
 - 이러한 아이디어는 중국경제의 부상 및 WTO 가입에서 비롯되었는데, 중국을 포함하는 대륙경제권과 일본을 포함하는 대양경제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 1999년 전 세계 화물운송의 27%가 한국을 경유하였는데, 이 비중을 2005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릴 계획임.
 - 또한 정보기술(IT)부문이 발전된 한국이 물류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면, 동북아국가들 사이의 효율적인 물류운송과 공급네트워크 형성에 한국의 IT산업과 인천 신공항, 그리고 부산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중요한 허브(hub) 역할을 할 것임.
- 다국적기업의 본부가 한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계획에 대한 미국 다국적기업의 관심이 중요함. 제주지역 역시 무관세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어 향후 한반도 전역이 동아시아지역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임.
 - 또한 동북아지역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북한을 경제개방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 계획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과 개방화, 일본의 에너지 수요충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이러한 인프라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0년대 말에 독일과 프랑스가 채택하였던 유럽 부흥개발은행(EBRD) 설립과 같은 방법도 준용될 수 있을 것임.

□ 동아시아 경제협력 (C. Fred Bergsten, IIE 소장)

-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한국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는 한·중·일 3국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가능성이 있음.
 - 한·일 FTA에 대해 IIE에서도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경제적 효과가 한국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이 포함될 경우 한국에게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최근 동태적 분석과 투자부문 및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고려하면 한·일 FTA도 한국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한국에게는 양자간 또는 소지역 자유무역협정보다 APEC 또는 동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얻는 이익이 더욱 클 것임.

-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일본이 일·ASEAN FTA를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ASEAN FTA를 10년 이내 체결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실현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임.
 - 이들 FTA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한국은 ASEAN+3를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ASEAN의 입장에서는 시장접근을 위해 중·ASEAN FTA, 투자를 위해 일·ASEAN FTA, 원자재 공급을 위해 호·ASEAN FTA, 안보를 위해 미·ASEAN FTA를 논의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짐.

- 그러나 이러한 통상측면에서의 경제통합보다는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금융통합 논의가 더욱 진전되고 있는 실정임.
 - 일반적으로 통상부문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뒤 금융부문 통합이 논의되는 것이 기존의 추세였으나,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는 기존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부문에 있어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임.

- 통상부문에서의 경제통합 논의는 DDA협상이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미국 역시 유럽과의 통상협상이 어려움에 처하자 북미지역에서 NAFTA가 출범될 수 있었음.
 -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이 통상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세계 교역질서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려움.
 - 동아시아 경제블록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두 가지 행태를 보일 것인 바, 하나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유럽연합과 경제협력을 이루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정책방향이 다자주의를 보다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아시아통화기금(AMF)이 설립된다면 IMF와의 정책공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양 기구 사이의 정책공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임.
 - AMF 회원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AMF가 제안한 금융정책이 IMF의 정책방향과 상이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임.
 - AMF 설립문제는 경제 또는 기술적인 금융부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치적, 안보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음.
- 동아시아지역에서 경제통합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은 크게 변화될 것임.
 - 동아시아지역에서 경제통합이 성공한다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이 통합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전쟁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임.
 - 따라서 미국의 對아시아정책은 對유럽정책이 변화한 것처럼 변화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실정임.

2. 토론

가. 동아시아의 지역무역협력

- 미국측 인사는 중·ASEAN FTA 논의가 천천히 진행될 것이나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하고, ASEAN은 역내 투자흐름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함.
 - ASEAN은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일 FTA에 대해 일부 미국측 인사는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FTA 논의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킬 정치적 유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성사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중국의 입장이 한·일 FTA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중국은 WTO 가입 이후 FTA보다는 다자무역협상 및 국내 정책정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한국측 인사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이 이 지역의 안보문제, 특히 미국과의 안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나. 동아시아의 지역금융협력

- 한국측 인사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외환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감시기구 설립 및 정보

교환의 필요에 따라 동북아 금융협력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중·일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경제구조 역시 보완적이라기 보다는 경쟁적이어서 동북아 금융협력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고 함.

다. 한국의 구조조정 경험 공유

- 미국측 인사는 일본이 안고 있는 금융부문의 문제 중 한국의 성공사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 금융위기와 상관없는 인사들이 정권을 잡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나 일본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추진

- 한국측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전략을 위해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규범중심의 경영활동, 투명한 정책 및 경영환경 조성, 전문 법체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확충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함.
 -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안정 역시 중요한 요소인 바, 정부의 효율적인 정치력 발휘가 이 전략의 성공을 위해 필요함.
 - 또한 아시아지역에서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한국의 국제비즈니스 중심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협력이 절대 필요함.
- 이에 대해 미국측은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런던, 홍콩, 마이애미와 같이 사회가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와 외국어 능력 제고가 요망된다고 주장하였음.

Korea-US Trade and Investment Issues: A Need to Think Anew

Remarks

by

Kim Kihwan

at

Korea-U.S. Twenty-First Century Council
Seventh Annual Meeting

April 8-9, 2002
Washington, DC

Korea-US Trade and Investment Issues: A Need to Think Anew

Kim Kihwan

Let me first say what a great pleasure and honor it is to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I am privileged to start off this discussion on trade and investment issues pending between our two countries. In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first to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ongoing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our two nations. Second, I will identify what the major issues are and then examine why and how they have become issues. Finally, I will conclude with a number of general observations as to what we should or should not do with regard to these issues.

An Overview

Trade has grown considerably between our two countries in recent years, but due to extreme fluctuations in the volume of trade, real growth over the 1995-2001 period seems to have been rather limited. The volume of annual two-way trade reached \$50 billion in 1995, stagnated for about two years and then began to drop in 1997. In 1998, when Korea was at the height of its financial crisis, the volume dropped by almost 20% to \$43 billion, but in 1999 it began to recover quickly and reached \$67 billion by 2000. Reflecting the sharp economic slowdown in both countries last year, however, it again fell 27% to \$53 billion.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bilateral trade balance was in favor of the US for a number of year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Since the crisis, however, it has been in Korea's favor. Last year, Korea's trade surplus with the US was about \$8.8 billion. Seen from the US side, the trade deficit with Korea last year was the eighth largest bilateral deficit in the world. So far such deficits have not become a political issue, partly because as long as an economic boom lasted in the US no one seemed to have cared much about the deficits. However, if the US economy fails to recover sufficiently this year, such a deficit could become an issue fanning protectionist sentiments in the US.

These developments notwithstanding, it is comforting to note that the US continues to serve

as the largest export market for Korea. To the US, Korea is the seventh largest export market. Also, in terms of agricultural products, Korea is the fourth largest market after Japan, Canada and Mexico. On a per capita basis, Korea imports more from the US than Japan.

Besides being the largest export market for Korea, the US is also the largest investor in Korea. Its investment in Korea last year was worth close to \$4 billion. The US is also the largest destination for Korea's investment oversea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in absolute amounts Korea's investment in the US continues to be small. Last year it was no more than \$380 million, reflecting that Korea is not yet a major investor globally. Similarly, US investment in Korea accounts for a small percentage of its total investment abroad, reflecting again that direct foreign investment still represents a small part of the Korean economy.

Individual Trade and Investment Issues

Nonetheless, on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enormous importance of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to the two countries. Given this importance, it is not surprising to find that through a variety of channels the two countries have done their best to avoid serious friction. Compared to earlier years - for example, the mid-1980s - the 1995-2001 period saw relatively few trade frictions. And yet there are problems. Currently, there are at least seven major areas of contention. These include: (1) trade in automobiles; (2) trade in agriculture; (3)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controversy surrounding what the US calls "financial aid" extended to Hynix; (5) the US announcement of safeguard actions on steel; (6) the delay in the conclusion of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nd (7) US enforcement of its trade remedy laws including safeguard and anti-dumping actions, and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f these, (1) through (4) are primarily of concern to the US whereas (5) through (7) are of serious concern to Korea.

US Concern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US, there is little question that trade in automobiles is the top priority. To put it mildly, both the US government and automobile industry are unhappy with Korea. This unhappiness stems basically from the inability on the part of the US automobile industry to penetrate the rapidly growing Korean automobile market whos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ver the past 20 years has been over 10%. To this day, the US share of the Korean automobile market is miniscule - last year it sold fewer than 2,300 cars in the whole of Korea, making its share in the market 0.14%. This is in sharp contrast to what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has been able to achieve in the US market. Last year, it sold over 580,000 cars, resulting in a 4.6% share of the market.

There were times when the U.S. auto industry could make a strong case that this severe imbalance in automobile trade resulted from the numerous barriers to imports put up by the Korean government. Today, however, this argument would not hold as much water. The Korean tax authorities no longer conduct tax audits on the owners of foreign vehicles, nor are the Korean requirements for technical certification on imported automobiles unusually onerous. Most of the US complaints on this issue have been taken care of. To be sure, the Korean tariff of 8% on imported automobiles is of course higher than the 2.5% US tariff, but lower than the 10% EU tariff. Several months ago, the Korean government also reduced the special excise tax on cars as part of its drive to stimulate domestic consumption of all durable goods. As a result, no one could say today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artificially suppressing demand for automobiles i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no denying that some problems continue to aggravate US exporters in particular. One of these problems has to do with Korea's annual taxes on automobiles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Compared with domestic or other foreign cars, American automobiles are usually fitted with more powerful engines. Thus, representatives of the US automobile industry argue that such taxes are inherently discriminatory against US cars. In addition, the Korean public is not yet eager to buy foreign cars, especially American ones. From the point of view of Korean consumers, foreign cars are still too expensive; the average price tag of a foreign automobile is usually twice as high as that of a comparable domestic one. No doubt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ractice of the Korean tax authorities to assess a variety of other taxes on automobiles based on the initial prices of cars including the 8% import tariff. In addition, foreign cars in general are too "conspicuous" in that owning a foreign car attracts attention not only from ordinary citizens, many of whom are still protectionist at heart, but also from the criminal elements who look on foreign car owners as promising targets for their unsavory activities. Aside from the heavier annual automobile taxes on American cars due to their engine sizes, Korean consumers are not comfortable driving big American cars in a country that is one of most densely populated countries in the world.

In the area of trade in agriculture, currently there are two major issues to be addressed. One has to do with Korea's import of rice. During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s, the US pushed hard for minimum market access for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rice, hoping no doubt that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the minimum market access would favor

US rice. This hope, however, failed to materialize as far as the Korean market was concerned. Between 1995- 2000, Korea imported 542,000 tons of rice under the minimum market access obligation but it failed to include a single grain of American rice in these imports. The reason was that the Korean authorities wanted to import only inexpensive, low-grade rice for use in processed foods, rather than high-grade rice for direct consumption. It happens that US rice for the most part is high-grade which competes directly with Korean rice. In any event, it was only last year that Korea imported 30,000 tons of American rice, amounting to 21% of the total annual imports. It remains to be seen if this purchase was enough of a consolation to US rice growers.

The other issue in agricultural trade at the moment has to do with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requiring that not only all genetically modified imported products but also those products that have used a significant amount of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as ingredients carry labels showing that they are as such. The US claims that the coverage of this labeling requirement is too broad, thus imposing significant costs on its exporters. In addition, the US protests that similar labeling requirements are not imposed on domestic products, thus making this particular requirement a case of the failure on the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foreign export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studied the policies of other countries on these matters and is now in the process of consulting with the US for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 was listed on the Priority Watch Countries in 2000. It continues to be on this list. The US finds that Korea still falls short in several aspects: (1) in US' judgment transparency in the enforcement of relevant laws by Korean authorities leaves much to be desired; (2) Korea fails to accord national treatment when it comes to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ies owned by foreigners; (3) Korea does not provide full retroactive protection for pre-existing works, as required by the WTO TRIPS Agreement; (4) Korean authorities are far too liberal in allowing the replication of original work for use in public libraries and similar institutions; (5) the authorities also fail to protect properly the confidentiality of proprietary information submitted for the testing of pharmaceutical products; and (6) Korea's copyright protection of computer data bases and business application software is still not sufficient. In short, the U.S. government feels that Korea's performance falls short of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whereas the Korean government insists that it is fully compliant with the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financial aid" extended to Hynix, the story is a little complicated.

Towards the end of 2000, the Korean government was in a quandary as to what should be done with the large amount of bonds that had been issued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and were to mature for the most part in the first half of 2001. The government felt that unless some measures were taken, the huge amount of bonds were not likely to be rolled over by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ir preference for asset holdings shifted away from the corporate sector. The government feared that this would not only wreak havoc in the capital market, but also unravel the entire financial system. Because of such concern, the government directed the state-owned Korea Development Bank to organize financial institutions to roll over 80% of the value of the maturing bonds if companies concerned themselves would repay 20% of their debt. The government laid down three conditions, however: (1) bonds are to be rolled over by creditors at the going market interest rate; (2) the 80% rollover facility will be extended to all companies as long as they have credible plans to restructure their operations; and (3) judgments on whether or not the conditions just mentioned are met will be made entirely at the discretion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mselves. Under this policy, nearly 10 trillion won worth of corporate bonds have been rolled over to date. One of the most important beneficiaries of this policy was Hynix, a major producer of semi-conductor chips.

Shortly after the policy was announced, US Senators from the states of Idaho and Utah, where a US company named Micron - a competitor of Hynix - principally operates, called on Mr. Robert Zoellick, USTR, to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WTO for possible violation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by Korea. The US industry representatives insist that the rollovers by financial institutions, many of which are owned by the Korean government, amount to an illegal subsidy under the WTO code.

Korea of course disagrees on a number of grounds: (1) De-facto government ownership of a larg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not something that the government intended. It was a consequence of injecting large amounts of public funds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2) In any case, the decisions as to whether or not the rollover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were made entirely by the independent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s concerned without any interference from the government; (3) the rollovers do not represent any subsidy, since the interest charged is the going market rate; and finally, (4)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adopted this policy was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financial system, rather than to provide temporary relief to specific industries or enterprises. In any case, the Korean government notes that the rollover facility was an emergency arrangement which was to last for only one year.

That is where the argument currently stands. However, in an ironic twist, in December last year Micron proposed to buy a significant portion, if not the whole, of the Hynix operations.

To this day, the two sides have not reached a final agreement. I, for one, am watching this development with much interest. Micron's proposal to purchase Hynix makes me wonder whether or not the initial complaint it made was motivated not so much to seek "a level playing field," but to eliminate its competitor altogether. If this conjecture has any merit at all, I am also wondering if someone will bring an anti-trust suit against Micron by the time it completes its purchase of Hynix. It has been reported that a Micron takeover of Hynix will give Micron more than a 40% share of the global market for semi-conductors.

Korea's Concerns

The current dispute on trade in steel was triggered by President Bush's announcement on March 5 that the US would impose surcharge tariffs ranging from 8-30% on 14 different steel products as a safeguard measure that will remain in effect for three years with a sliding tariff schedule. It has been reported that President Bush made this decision for at least three reasons. The most obvious one is of course that his decision is more or less in lin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USITC.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 US steel industry is really in bad shape; thus the President wanted to provide some relief.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US industry is having a tough time. Since 1997, no less than 32 steel firms have filed for bankruptcy. The third reason is based on a political calculation. The President's top priority in the trade area is to have Congress pass legislation giving the President the Trade Promotion Authority, a new name for the fast-track authority, in order to improve the chance for a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Doha Agenda. President Bush thought that he would be able to secure more votes for that legislation if he pacified some legislators from the steel states by taking the safeguard action.

Despite these rationales, the announcement of the safeguard action was sufficient to anger many steel exporters throughout the world. For one thing, the safeguard was invoked on top of many anti-dumping actions on steel products currently in force. For another, a high-level OECD group, of which the US is a member, held several meetings last fall and this spring to come up with a set of recommendations dealing with global excess-capacity to be finalized in April this year. Also, since 1998, the share of imported steel in the total steel consumption in the US was falling rather than rising. In other words, there has been no evidence of import surges, which is the *sine qua non* of any safeguard actions. What's more, non-American steel producers do not believe that safeguard actions will do any good in solving the basic problems in the US industry. In their view, the US steel industry is so inefficient that no amount of temporary relief to be accorded by safeguards will do any good.

No wonder the EU has already made the decision to appeal to the WTO. In addition, the

EU has announced that it would consider retaliating against the US by putting tariff surcharges on US automobiles, handguns, fruit juices, and textiles.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announced its decision to appeal to the WTO as the US failed to take into account its concerns before March 20. The Korean government also followed suit. For one thing, it believes that the safeguard action by Bush will cut Korea's total annual steel exports to the US of about \$1.1 billion by \$200-300 million, some 18-27%. In addition, like other steel producers in the world, Korea worries that the US safeguard action has already created a chain of protectionist reactions throughout the world. For example, the EU is now going to impose a fresh set of tariff rate quotas on steel. Similarly Malaysia is going to increase its tariffs on steel by 50%. China is about to initiate its own safeguard investigations to make certain that those steel products diverted away from the US will not flood its market. What a spectacle this is only a few months after the Doha Agenda was launched! Korea is indeed concerned with the adverse effect of the US action on forthcoming negotiations on the Doha Agenda. To boot, bad as it was, the safeguard action taken by President Bush, it seems, has not succeeded in garnering sufficient votes for the Trade Promotion Authority.

As for the delay in the conclusion of a Bilateral Free Investment Treaty, blame should be laid more at Korea's door. It was Korea that proposed entering into such a treaty in the first place in June of 1998 when President Kim Dae Jung visited the United States.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n the treaty has been held up on three relatively minor issues: (a) a screen quota; (b) retroactive protection of copyrights; and (c) increasing foreign ownership of shares in telecommunications. There is no reason why Korea should continue to take a rigid stance on the minimum number of days domestic movies ought to be shown in the theatres at home under the so-called screen quota. Especially over the past three years or so, Korean movies have become noticeably competitive. Not only have they made sales overseas, but in the past two years the domestic market share held by Korean movies has been over 50%. This is far in excess of the 40% target the screen quota was intended to achieve. The additional cost to be born by the Korean publishing industries due to the extension of retroactive protection of copyrights likewise is likely to be minimal. Furthermore, in this day and age, where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s undergoing revolutionary technological changes, and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s are so intertwined globally,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in telecommunications do not make much sense.

On the administration of anti-dumping actions and safeguards, as well as countervailing actions, let me first note that some twenty Korean exports are currently subject to anti-

dumping actions and on two products investigations are underway.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in view of what I have said about the US protectionism on steel, of the twenty products subject to anti-dumping actions, seventeen are steel products, and one of the two products under investigation is also a steel product. It is also worrisome to note that anti-dumping margins imposed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have become much higher since 1998.

There may be certain circumstances where anti-dumping actions may be justified, but in the context of the US and Korean situation, one is hard put to find examples. Over the past five years, Korea has appealed to the WTO three cases of anti-dumping and one of safeguard actions -- on colored televisions in 1997, on DRAM in August 1997, on stainless steel plates in 1999, respectively, and the safeguard action on steel line pipes in 2000 -- and Korea won all of these cases. This may be an indication that the US invocations are at best undisciplined.

A related development in this area is of great concern to Korea. In October 2000, under the leadership of Senator Robert Byrd, legislation was passed that allows the transfer of US government revenues from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ions to the parties who brought the petitions. Needless to say, this legislation encourages US industries to br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petitions to the US government - a classic case of moral hazard, if ever there was one. Fortunately, this issue is now under review by a WTO panel.

Some Observations

In summary and conclusion, I would like to make several observations based on the foregoing discussions.

One of these relates to the fact that over the past several years, Korea had a relatively easy time as far as trade friction with the US is concerned compared to other periods. This has a lot to do with the US economic boom as well as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Now that the economic boom has ended in the US, and Korea is not in a crisis, Korea can no longer count on US patience with Korea's slow action in resolving trade issues with its trading partners. What's more, if economic recovery in the US comes slowly, Americans will become more impatient in dealing with its trading partners on a variety of issues. For these reasons, Korea should expect some tough going ahead. This will be all the more true if the US dollar remains strong and the Korean won weak.

My second observation concerns the implications of the recent US safeguard action on steel. For the health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US moral leadership is essential. If the US,

the only hegemonic power left in the global communit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fails to provide leadership for free trade, the future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is dim. If the US does not practice what it preaches, as shown in the current safeguard action on steel, the US may as well forget about forming a global alliance on such matters as terrorism.

My third observation is somewhat related to the second. The round of trade negotiations on the Doha Agenda must be concluded within three years. For this objective to be achieved there should be close coordin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Our two countries should be close allies to each other not only in the field of security but in the trade area as well,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Doha Agenda. I am afraid, however, that unless close consultation takes place, our two countries may not at all be helpful to each other largely because the views they have on a number of key issues are so disparate. On the whole, the US is very keen to open the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further, whereas Korea wants to take a gradual approach as far as agriculture is concerned. The US also takes a dim view of the WTO's role in modifying the anti-dumping rules as applied by different countries whereas Korea believes that much of anti-dumping practices should be replaced by adopting competition laws. It is about time to discuss these issues more frankly and honestly between our two countries instead of trying to fight over them before the global audience as it were.

My fourth observation concerns the lack of leadership in both governments in dealing with trade and investment issues. There is no good excuse for allowing certain trade and investment issues to continue to fester. A case in point is the delay in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he deeper cause for this delay, in my view, has to do with lack of leadership at the very top level of government, especially on the Korean side. This in turn is a result of the fact that economic policy making in Korea in recent years has been far too fragmented with little central coordination to ensure the maximization of national rather than parochial interests. The national benefits from maintaining the screen quota in my opinion is literally nothing compared to the benefits the country could reap from entering into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with the US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This is especially true now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as a matter of official policy to transform Korea into as a business hub in Asia la Singapore or Hong Kong. This will remain a pipe dream unless Korea can attract a large amount of investments from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rough investment treaties. What's more, if Korea cannot conclude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with the US, how in the world could it ever think about entering into a free trade arrangement with the US which would be highly desirable not only on economic but

also on geopolitical grounds?

My fifth observation concerns the need to recognize that there are limits to what government, as opposed to the private sector, can do to resolve certain trade issues. By now, the inability of the US automobile industry to achieve greater market penetration in Korea has far less to do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more to do with its own competitiveness and the perceptions -- right or wrong -- of the Korean public. This being the case, the US auto industry should do more to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through better product design and increased investment in marketing to change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Korean public with regard to foreign cars and American cars in particular. However, this is not to say that in connection with the Doha Agenda the US cannot request a reduction in Korea's tariff rates on automobiles or a change in the basis on which the annual automobile taxes are levied.

Finally, in this era where the market is becoming increasingly global, no country can or should insist that its competition law is one thing, and the competition laws of other countries are another. There must be a common set of rules that apply to all economic players,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In other words, it is about time for the US to take a more positive view of global competition policy and a less rigid stand on the need to maintain its set of trade laws. If the US continues to insist on retaining and imposing its trade laws, the rest of the world will take a cue from the US and keep legislating more and more trade remedy laws of their own, hardly a desirable development in the globalizing world.

Thank you.
